



언론에서 바라본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신 동 호

<동아일보> 과학 담당 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자로서 느낌 점

1. 양과 질에서 모두 부실한 규제 기관의 정보 제공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거나 고장을 일으켜 발전이 정지되는 경우 규제 기관인 과기부가 제공하는 보도 자료가 상세하지 않다. 보도 자료가 상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과기부가 제공하는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라도 자세해야 하는데 매우 간략한 내용만 담고 있다. 원자력 사고/고장 관련 보도 자료나 인터넷 정보 공개 내용은 ‘빠다귀’를 연상시킨다.

반면 환경 단체나 반핵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상세하다. 또한 반핵 단체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해당 지역원자력본부의 내부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규제 기관이 제공하는 원

전의 사고/고장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반핵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상세하기 때문에 언론 기관은 반핵 단체의 정보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과기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규제 기관은 “언론 기관과 기자가 반핵 단체의 주장만을 받아서 쓰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으나 사고/고장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규제 기관이 있는 한 정보의 부족 상태에 있는 언론 기관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핵 단체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과기부가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꺼리는 것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는 2002년 10월 25일 국내 최초로 방사선 백색 비상이 발령된 울진 3호기의 사고에 대한 보도 자료, 인터넷 공개 내용, 반핵 단체의

성명서이다(반핵 단체 보도 자료는 분량이 많아 게재치 않음-편집자).

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를 보면, 백색비상 발령 상황은 중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제공된 보도 자료는 너무 간단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첫째, 이번 백색 발령이 한국 최초의 백색 발령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다. 한국 최초의 백색 발령인지 과기부 원자력안전과에 물었으나 과기부 담당자는 “처음인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히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다”며 방사선안전과에 물어 보라고 답변하였다.

둘째, 보도 자료만 보고는 백색 발령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이고, 경보 발령에는 황색·청색·적색 등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어느 정도 높은 단계가 백색 비상인지 알 수 없음

셋째, 냉각재의 방사능 준위가 상승했다고만 되어 있지 얼마나 상



• 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울진 3호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통보

울진원자력발전본부는 계획 예방 정비중인 울진 3호기의 원자로 냉각재의 방사선 준위가 상승하여 2002년 11월 25일 10시 20분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하였다고 과학기술부에 보고하여 왔다.

※ 백색비상이란?
원자력발전소 건물 내에 국한된 이상 상태에서 발령하는 비상 등급으로 원자력 사업자와 규제 당국의 경계를 요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발전소 주재관실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단의 비상 근무를 발령하고, 비상대책반(반장 : 김선빈 원자력방재과장)을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발전소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울진 3호기의 방사선 준위가 상승한 원인은 연료 피복재의 손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과학기술부는 진행 사항을 수시로 과기부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3679-3901-4)

• 과학기술부의 인터넷 원전 사고/고장 정보 공개 내용

사 업 자 제 공 정 보	사건	울진 3호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방사능 농도 증가		
	해당 원전	울진 3호기	발생 일시	'02. 11.25. 10:20
	사고·고장 등급 (잠 정)	0등급	사건발생시 출력	해당 없음
	상 황	2002년 11월 23일 00시 10분에 발전 정지후 제4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냉각 운전 수행 중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방사능 감시기 제한치인 50000CPM을 초과 (54000CPM)하여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하다.		
	원 인	분석중		
	소내·외 방사능 누출 여부	없음		
	안전 조치의 내용 및 향후 대책	○ 원자로 냉각재 방사능 준위 및 운전 변수 감시 ○ 방사능 준위 추이에 따른 대책 수립		
	기타 참고	없음		
	과기부 검토 의견 또는 조치 사항(※)	없음(향후 재공개)		
	문 의 처	소속 및 직위 원자력안전과 행정주사	성 명 김상희	전 화 02-503-7650

승했는지 알 수 없다.

인터넷 원전 사고/고장 정보 공개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PM이란 단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둘째, 너무 내용이 짧아서 이 내용만으로 도저히 기사를 쓸 수 없다.

셋째, 조사 등을 모두 생략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넷째, 내용은 조금만 공개하니 관심있는 사람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세히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럴바에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무엇하리 인터넷 코너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다섯째, 과기부의 검토 의견 또는 조치 사항이 없다. 백색 비상이 일어나는 경우 다양한 조치 사항이 있고, 검토 의견도 있을텐데 사업자 제공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반핵 단체가 당시에 내놓은 보도 자료와 논평을 보면 울진 3호기의 문제점을 훤히 파악할 수 있다. 보도 자료의 상세함에 있어서 규제 기관인 과기부의 보도 자료와 인터넷 공개 내용은 반핵 단체에 훨씬 못 미친다.

반핵 단체가 내놓은 보도 자료에는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 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보도 자료를 매우 정성껏 자세하게 작성하고,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성껏 만든 보도 자료에 대해 기자는 더욱

더 끌리게 되어 있다.

규제 기관이 제공하는 보도 자료와 인터넷 공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국민과 언론에 대한 사고/고장 정보의 공개가 ‘면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나 고장이 큰 사건으로 비화했을 때 나중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자세하게 공개할 경우 더 사건이 커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적어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사건이 기사화되는 경우 이는 대부분이 환경 단체나 반핵 단체 또는 국회의원 이 자료를 분석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소한 정지 사고 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수력원자력과 과기부가 이를 먼저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 기자 핑퐁치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나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 취재원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 지역 원자력본부, 지역 원자력본부 과기부 주재관, 과기부 원자력안전과, 과기부 공보실 등.

필자는 초기에는 과기부나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에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았으나 실제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나는

모르다면서 다른 부서로 자꾸 떠넘기는 경우를 많이 당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기자는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되고 악감정이 생겨 사실을 더 과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필자는 해당 원자력본부 주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편인데, 과기부 주재관이 사고나 고장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 경우 필자는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규제 기관을 대표해 파견을 나가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냐고 추궁한다. 그러면 대체로 주재관은 비교적 소상하고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다.

앞으로 지역 언론이나 중앙 언론 기관에 원자력 안전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현장 사정에 밝은 과기부의 지역 주재관 이름을 해당 보도 자료의 끝 부분에 넣어서 언론이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 주재관은 더욱 막중한 책임도 느끼게 될 것이다.

3. 규제 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은 과기부이다. 그러나 과기부는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의 안전 규제와 원자력 기술 개발을 동시에 떠맡고 있다. 과기부 장관과 과기부 원자력 국장은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원자력의 안전을 위한 규제 활동도

해야 하는 모순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 원자력국 내에서 자신의 업무는 원자력 기술 개발이 아니라 안전 규제라고 굳게 믿는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른바 ‘원자원 마피아’ 속에서 ‘나는 원자력 안전 지상주의자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다. 원자력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나 반핵 단체가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 과기부 원자력국 공무원들의 공통된 사고 방식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대중 커뮤니케이션도 이런 편향된 시각에서 국민에게 원자력의 안전성을 홍보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과기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풍토가 기자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4. 원자력 안전 정보 관련 축소 은폐 논란이 가속화됨

이처럼 안전 규제 기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에 원자력 관련 사고/고장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늘 규제 기관이 문제를 축소는폐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상당 부분 축소 은폐가 사실이었다.

아래의 사례는 국회 과학기술정



보통신위원회 김희선 의원이 그 동안 보도된 축소 은폐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2002년 울진 4호기 전열관 파단 사고의 경우, 운전 정지중 발생한 사고여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홈페이지 공개에서 '냉각수 수동 공급'이라고 발표하여 전열관 파단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 2001년 월성 원전 활성 단층 논란(월성 원전 인근 경북 경주시 수렴리 수렴 단층이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 단층일 가능성)시 과기부장관(김영환)은 국정 감사에서 "수렴 단층의 활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보고했는데 이에 앞선 과기부 입장 발표에서는 활성 단층이 아니라고 밝혀 국정 감사에서 축소 은폐 논란이 일어남.

- 1999년 월성 원전에서 중수 누출로 20여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발생 20시간만에 과기부에 보고되고 다시 3시간 후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됨으로써 축소 은폐 의혹

- 1997년 월성 2호기 시운전중 냉각재 정화 장치의 연결 부위를 밀봉하는 개스킷 손상으로 중수 18t이 누출된 사고, 월성 3호기 시운전중 감속재 계통에 고장이 나 11t의 중수가 누출된 사고 등 4건은 과기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일반에도 공

개되지 않음.

- 1995년 고리 원전 방사능 폐기물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원전 내 15개 시설이 오염된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한 달 뒤에 과기부와 한전은 언론에 공개

- 일본에서도 도쿄전력사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10여년간 29건의 안전 관련 정보를 허위 보고한 것이 2002년 밝혀져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증.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현황

1. 현행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지침

가. 현황

과기부가 1998년에 제정하고 2000년에 개정한 원자력 사고 고장 공개 지침에 따라 원전 사고/고장 정보의 공개는 그 대상에 따라 신속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것은 언론 제공과 인터넷 게재를 병행(이하 '언론 공개'로 함)하고, 그 외의 공개 대상 정보는 인터넷에만 게재(이하 '인터넷 공개'로 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시간 이내에 사실 위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 및 지방 언론에 배포하고 과학기술부는 사업자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여 언론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언론 공개 대상은 국민에게 신속

히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고/고장 및 재해(방사선 비상, 방사성 물질 도난 등) 법적 제한치를 벗어난 원전 운전 상황, 종사자와 주민의 방사선 피폭, 방사능 물질 방출, 원자력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항(사고/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 및 자연 인공 재해 등)이다.

인터넷 공개 대상은 원자로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설비 및 기기의 사고/고장 또는 인공 자연 재해, 정상 상태를 벗어난 원전 운전 상황, 종사자 주민의 방사선 피폭, 방사능 물질 방출 및 방사능 오염, 평상 수준을 벗어난 원전 부지 내외의 환경 방사선량률, 공간 선량률이다.

사업자는 '언론 공개' 대상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시간 이내에 해당 원전의 과학기술부 주재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중앙 및 해당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다. 과학기술부는 사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최소한의 검토를 거쳐 보도자료 배포하게 되어 있다.

사업자는 '인터넷 공개' 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역시 과학기술부 주재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다.

게재되는 홈페이지는 과기부(

http://www.most.go.kr (정보자료실 원자력소식 원자력 사고 고장 정보내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http://www.kins.re.kr (원전사고/고장 정보) 사업자(한전) : http://www.kepco.co.kr (원자력에너지 원전사전정보) 이다.

나. 문제점

절차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지침이 법률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그만이며, 또한 공개된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개 의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로 원자력 안전 규제 정보 관리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법에서는 제89조, 제98조 제1항, 제102조에서 사고나 고장 등에 관하여 원자력 사업자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부나 원자력 사업자가 이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현행 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법제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 원자력안전정보센터 설립 추진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사고·고장 정보 시스템, 전국토 환경 방사선 감시 시스템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대통령 업무 보고서 원자력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 원자력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여(2002.11.11 예정) Cyber상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기존의 사고·고장 정보 시스템, 전국토 방사선 감시 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원자력 안전 개선 사례, 방사선 종사자 피폭 관리 현황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DB화 해나갈 예정이다.

전문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할 전담 기관으로 원자력안전정보센터를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정보센터가 언론 기관에 즉시 원자력발전소 고장/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언론 기관과 기사는 법적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을 과기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안 제정 움직임

가. 현황

2002년 국정 감사에서 4월에 발생한 '울진 4호기 고장' 과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돼 민주당 김희선 의원 주도로 22명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기부 고시로 공개가 규정되어 있는 원전의 고장 내용 이외에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있어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의 대상을 원전 사업자 이외에 연구 기관 및 규제 기관 등까지 포함하였으며, 과학기술부 장관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와, 원자력 관계자로부터 안전 정보의 수집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 정보를 수집·분석·공개 및 보관하는 전담 기관으로 (가칭) '한국원자력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이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정보센터의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자력 관계자 혹은 관계 행정 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안전 정보의 수요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안전 정보 센터의 장은 매년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에 관한 평가 결과를 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문제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와 신뢰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 원자력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독립 법인을 설립하여 원자력 안전 정보의 수집·분석·공개 등을 담당시킨다 하더라도 이 센터의 소장을 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하고 장관의 감독하에 존립하게 되어 안전정보센터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위탁 사항만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보 공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안전 정보의 공개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 기관이나 기사는 원자력발전소 등에 문제가 터졌을 때 직접적인 규제 기관인 과기부의 고위 담당자에게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립 기관으로 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한다고 이곳을 상대로 취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규제 기관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규제 기관이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원자력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보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자력안전정보센터를 개설·운영(4~5명 정도)할 예정이다. 설립 추진중인 한국원자력안전정보센터와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안

1.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의 독립

국민과 대중 그리고 언론 기관에게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규제 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과기부는 199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기부 장관)를 구성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기부의 자문 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원자력 발전 주무 부처 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위원회에 산자부와 한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년에 3~4

회 열리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승인을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보고 현황 청취 안건이 대부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 독립시켜 원자력 안전에만 전념하도록 한다면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고장에 대해 축소 은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법을 대폭 수술하고 원자력안전법을 제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의 최종적인 건설 허가를 내주도록 해야 한다.

안전 규제 기관이 원자력 발전을 하는 기업이나, 정치적 압력, 그리고 개발 부서나 조직, 그리고 반핵 단체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96년에 발효돼 한국도 가입한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은 8장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고 장려하는 조직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75년 원자력규제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mmission)를 원자력에너지위원회로부터 독립시켜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를 맡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며 5인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고 여당:야당=3:2로 위원을 추천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발전소에 주재관 파견하고 있다.

NRC는 PDR(Public Document Room)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안전 정보 관련 폴텍스트를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Nuclear Safety Act에 따른 법적 기관이다.

캐나다도 2000년에 원자력에너지 컨트롤보드(Atomic Energy Control Board)를 원자력안전위원회(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로 개편했다.

일본은 1978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에너지위원회에서 독립했으며 2000년에 통산성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시켜 수상 직속으로 두었다.

이밖에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발 부서나 에너지 부서로부터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독립시켜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개 원자력 에너지 이용 초기 단계에서는 부적절한 안전 규제가 기술개발을 방해하지 않을까 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구를 원자력 에너지 개발 부서의 밑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 도상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국이 원자력 선진국으로 불리는 지금, 더구나 한국이 세계에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마당에 원자력 안

전 규제 기구를 독립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핵분열은 일으키기 어렵지 않은 자연 현상이며, 원자력 기술의 요체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핵분열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안전 규제 기관이 수준이 높을 때 원자력 기술의 수준도 발전한다. 다시 말해 좋은 규제 기관이 좋은 원자력 기술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만든 원자력 코드를 도입해 발전소를 건설해왔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원자력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이고 한국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서 배울 수만 없는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코드와 안전성 시험 및 보장 기술을 배우오는 데도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이제는 안전 규제 기관을 독립 발전시키고 전문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 요원들을 양성해 나가야 앞으로 진정한 원자력 선진국의 대열에 들 수 있다.

2. 독립된 안전 규제 기관이 직접 안전 정보 공개

경제 분야에 재경부·한국은행이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들 부처를 견제함으로

써 경제가 균형을 이루듯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안전이 핵심인 원자력 분야야말로 이제 안전 규제 기관을 독립시킬 시기이다.

한국은 전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재료 공학이 가장 강한 국가이며, 원자력 기술의 상당 부분은 재료 공학 기술이다. 따라서 규제 기구를 독립하고 우리 스스로 안전 규제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외국에서도 한국의 안전 규제 수준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도 원자력 안전 규제 기구가 각종 고장과 사고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잘못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할 때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신뢰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신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핵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중·저준위는 적어도 수백년, 고준위는 수만년 동안 안전해야 한다. 처분장이 들어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안전 규제 기관이다.

이런 안전 규제 기관이 나올 때 핵폐기물 처분장 주변의 사람들도 이 규제 기관을 믿고 처분장 건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